



홈 뉴스 정치 정당

"교과서 국정화는 주민주권 원칙 위반"

[0호] 2015년 10월 19일 (월) 19:04:26

강영희 기자

국회 김윤덕(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)의원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중론이었다.

김 의원은 19일 한국국가법학회, 우석대 역사교육학과, 군산대 사학과 등 전북지역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'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?'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.

이 날 오후 3시 정호윤 전라북도의원의 사회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토론 행사에서는, 오항녕(전주대) 교수와 이우종(사대부고)교사, 신옥주(전북대)교수, 박동천(전북대 교수)의 발제에 이어, 강승규(우석대)교수가 좌장을 맡아 조법종(우석대)교수, 김종수(군산대)교수, 권익산(원광대)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에 나섰다.

오 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"국정교과서의 틀은 유신시대에 만들어졌다"면서 "실력없는 역사학자들이 만들 불량 한국사 교과서로 소중한 학생들의 머릿속을 더럽히는 일은 막아야 할 것"이라고 주장했다.

또한 이 교수는 현행 초등학교 5학년 국정교과서에 드러난 사실오류와 확대해석 등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"불필요한 국정화 논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역사를 논하고 서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"고 역설했다.

신 교수는 "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원칙과 주민주권 원칙의 위반이다. 특히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자유권을 침해하고,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"고 비판했다.

박 교수는 "국정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조차 과거 자신의 발언을 뒤집으며 권력에 맹종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암담하다"며 "역사적 진실을 권력이 재단해서는 안된다"고 강조했다.

이 날 행사를 마련한 김윤덕 의원은 "박근혜 정부는 '균형'을 잃고 불균형 국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, 국정교과서 추진이야말로 '균형'을 잃은 가장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"이라고 비판했다. /서울 = 강영희기자 kang@sjbnews.com

© 새전북신문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